

배포 일시	2022. 9. 19.(월)		
담당 부서 <총괄>	종합교통정책관실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김정희(044-201-3804)
		담당자	서기관 최민석(3792), 사무관 노지훈(3791), 심동휘(3788) 주무관 마철훈(3795)
보도일시	2022년 9월 2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19.(월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「모빌리티 혁신 로드맵」 발표

자율주행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2년 <b>부분자율주행(Lv3) 승용차 출시</b>(세계 세 번째)</li> <li>'25년 <b>완전자율주행(Lv4) 버스·셔틀 출시</b></li> <li>'27년 <b>완전자율주행(Lv4) 승용차 출시</b></li> </ul> <p>☞ '35년 자율차(신차) 보급률 50% 이상 달성, 교통사고 사망자 수 年 1,000명 이하로 감축('21년 2,916명)</p>
도심항공교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5년 수도권 지역에서 <b>최초 상용 서비스 출시</b></li> <li>'30년 <b>주요 권역별 서비스</b>를 통해 UAM 서비스 전국 확산 (부산 EXPO 개최 시 방문객 대상 UAM 서비스 제공 등)</li> <li>'35년 <b>광역형 서비스 본격 시행</b>(고속·시외버스 유사)</li> </ul> <p>☞ '35년 도심 및 광역 거점간 이동시간 70% 단축 전국 UAM 이용자 수 일 21만명으로 서비스 활성화</p>
디지털 물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3년 <b>공동주택단지 내 로봇 배송 실시</b></li> <li>'27년 <b>도시철도망 활용 물류 서비스 실시</b></li> <li>'40년 <b>하이퍼튜브 물류 서비스 실시</b></li> </ul> <p>☞ '40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반나절 생활물류 서비스 구현 철도 화물 수송 분담률 8.0% 달성('19년 분담률 3.9%)</p>
모빌리티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3년 <b>2기 신도시 수요응답형 서비스 본격 시행</b></li> <li>'30년 대도시권 주요 환승 거점에 <b>미래형 환승센터 조성</b></li> <li>'35년 모든 모빌리티를 연계한 <b>전국 단위 MaaS 구현</b></li> </ul> <p>☞ '35년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 20분대로 단축('19년 40분대) 인구 10만 이상 도시간 2시간대 이동 실현</p>
모빌리티 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3년 <b>모빌리티 특화도시</b> 조성을 위한 <b>도시계획 수립 착수</b></li> <li>'28년 전국 최초의 신도시형 <b>모빌리티 특화도시</b> 입주 개시</li> <li>'40년 전국 대부분 <b>주유소, 주차장</b> 등에서 <b>퍼스트·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연계 서비스</b> 제공</li> </ul> <p>☞ '40년 모든 신규 개발지구에서 <b>미래 모빌리티</b> 구현 전국 도시의 절반 이상에서 <b>특화형 모빌리티 서비스</b> 제공</p>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9월 19일(월) 모빌리티(Mobility)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「모빌리티 혁신 로드맵」을 발표하였다.

## 1. 추진 배경

-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·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, 즉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있으며,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.
  - \* 글로벌 시장은 '17년 4,400조원에서 '30년 8,700조원 규모까지 성장 전망(맥킨지, '19)
- 이에,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과 핵심 국정과제인 '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'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,
  -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현구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,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'모빌리티 혁신위원회'를 운영(6.30~)하여 민·관 합동으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.
    - \* 혁신위 전체회의 3회, 자율차·UAM·디지털 물류·모빌리티 서비스 분과별 격주 논의 등

## 2.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

\* 중점 과제는 파란색 및 밑줄 표시

### ① 과제1 :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

- '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(Lv4)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구현하여, 차량 내 휴식·업무·문화를 일상으로 만들고, 교통사고 예방, 도로 혼잡 해소 등에 기여한다.

#### (1) 자율주행 서비스 일상 안착

- 올해 말,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(Lv3)를 상용화하고, 완전자율주행 버스·셔틀('25)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('27) 등을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.
  - 이를 위해 '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.

□ 교통약자 이동 지원,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·확산을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.

\*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:

(제1차<sup>20~21</sup>) 경기 시흥(수요응답형 심야 셔틀) → (제2차<sup>22~23</sup>) 대구 및 제주

## (2) 자율주행 규제 혁신

□ '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인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'24년까지 Lv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.

○ Lv4 차량 시스템(결합시 대응 등), 주행 안전성(충돌 시 안전 확보 등) 등 자동차 안전 기준(제작 기준)을 마련하고,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\*를 운영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없는 운영을 지원한다.

\* (현행)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차량에 한하여 5년간 운영 가능 →

(개선) 별도 성능 인증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기한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운영 가능

○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Lv4에 부합하는 운행·보험제도도 마련한다.

\* (보험제도) 운행자, 제작사,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간 사고 책임 명확화

(운행제도)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추어 운전자 개념 재정립 등

□ 자유로운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토록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의 국토부 직권 지정 제도\* 도입 등을 통해 '25년까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시·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하고,

\* (현행) 지자체장 신청 시에만 지정 가능하여 시·도 등 광역권 지구 지정·운영 제약  
(개선) 국토부 직권 지정으로 다양한 지역 범위의 지구 운영 가능

○ 이후에는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규제 특례를 대폭 확대한다.

□ 자율주행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신고제에 준한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하고,

- 소형 무인배송차 등 현행 차종 분류체계에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제작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기반도 강화한다.

### (3) 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

- 자율차-자율차, 자율차-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한다.

- '30년까지 전국 도로(약 11만km)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되, 자율주행 체계에 대한 지원이 특히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'27년까지 선제 구축해나간다.

\* (1단계<sup>~23</sup>) 주요 고속도로 → (2단계<sup>~27</sup>) 도심 및 전국 주요도로 → (3단계<sup>~30</sup>) 전국 도로

- 통신 방식은 직접통신 방식(WAVE 또는 C-V2X)을 기본으로 추진하되, 비혼잡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이동통신망을 활용(V2N 방식)하여 속도감 있게 구축하는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축을 추진한다.

- '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\*하고, 실시간 갱신체계도 구축\*\*한다.

\* (1단계<sup>~22</sup>) 국도(고속도로 기 구축) → (2단계<sup>~25</sup>) 4차로 이상 지방도 → (3단계<sup>~30</sup>) 전국 도로

\*\* 갱신 주기 단축 계획 : (현행) 1년 → ('23) 한달 내 → ('30) 실시간 갱신 (민관 합동 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을 구성하여 효율적 갱신체계 마련 추진)

-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·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한다.

## ② 과제2 :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

- '25년 도심항공교통(UAM)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,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,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.

### (1)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본격화

- '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, '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\*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.

\* 도심지 실증 노선은 국방부 등과 공역 협의를 거쳐 '23년초 확정·발표 추진

- 아울러, '25년 본격 서비스 추진을 위해 '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도 마련하는 한편,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광형·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해나간다.
- 도서지역 긴급 택배, 도심 화물 운송,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지속 확대한다. (상용화 서비스 '20년 4건 → '25년 20건)

## (2) 선제적인 규제 개혁

- UAM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UAM법을 제정('22.8 기 발의) 한다. 특히, 실증·시범사업 시 항공안전·사업·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하여 신산업을 적극 지원한다.
- '25년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심형, 관광형, 광역형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사업자 요건, 운수권 배분,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.
- 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·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(현행 33개 구역)을 추가 지정하고, 비행 승인 요건, 안전성 인증 절차 등도 함께 완화해나간다.

## (3) 맞춤형 인프라 투자

-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(이착륙장)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.
- 우선, 김포·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우선 구축하고, 이후 철도역사,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간다.
- 아울러, 자율 비행, 운항정보 교신, 기내 인포테인먼트 지원 등을 위해 최초 상용화 노선을 중심으로 5G 통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해나간다.

□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 체계(UATM, 중고도)를 구축하고, 이후 UAM, 드론,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한다.

\* 저고도(UTM), 중고도(UATM), 고고도(ATM) 등 공역 관리 통합 운영

○ 공항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공항에 접근한 비행체의 자동 이·착륙을 지원하고, 미승인 비행체는 강제 포획하는 자동 비행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항공 모빌리티 안전성도 확보한다.

#### (4)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
□ UAM 핵심기술 적기 확보를 위해 국가 R&D를 추진(내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신청)하는 등 정부가 기술 개발에 선제 투자하고,

○ 실증 사업 참여 기업이 '25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경우,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.

### ③ 과제3 :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

□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,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,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다.

#### (1)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 실현

□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·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·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.

○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·이륜차로 제한되어 있는 배송 수단을 로봇·드론까지 확대(생활물류법)하고,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\*(도로교통법)한다.

\* (현행) 도로교통법상 배송 로봇은 '차'로 분류되어 보도 통행 불가 → (개선) 배송 로봇을 '보행자' 정의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허용



- 공공 다중이용시설, 공동주택단지,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하고, 특히,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하고, 민간에 개방하여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한다.
- 자율주행 화물차, 지하 물류,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을 다각화하여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.
-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하여 '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, 지하 도시철도망 활용 기술·서비스 개발,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하 물류도 활성화한다.
- 초고속 운송(800~1,200km/h)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핵심 기술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.

## (2)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 대전환

-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,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\*도 확대해나간다.
- \* 현재, 천안(LH), 여주(도로공사), 제주(제주도청)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(~'25)
-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 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물류 센터로 인증하고, 인센티브도 확대한다.
-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 허용(물류시설법),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(생활물류법) 등 과감한 입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첨단 인프라도 확충한다.

## (3)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

- 물류 새싹기업(스타트업)을 위해 발굴·보육 및 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DNA+ 융합기술대학원을 통해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,
- 물류 플랫폼 사업 제도화, 물류진흥구역 도입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기반으로 물류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.

#### 4 과제4 :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

□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, 첨단 기술을 융·복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·확산한다.

##### (1)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

□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요를 반영·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 (DRT, Demand Responsive Transport)등을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한다.

○ 이를 위해 현재 놓여진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, 심야 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,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.

○ 노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.

\* 예시 : <sup>1)</sup>이용자 수 증가 시 중간 정차지 추가 (A-B-C ⇒ A-B-C'-C)

<sup>2)</sup>이용자가 많은 정차지에서 운행 시작 (A-B(최다 이용)-C ⇒ B-C) 등

□ 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와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MaaS(Mobility as a Service) 활성화를 지원하고, 우선 공공 주도의 선도 사업도 추진한다.

\* Maas : <sup>1)</sup>다양한 이동수단·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<sup>2)</sup>최적경로 안내, <sup>3)</sup>예약·결제, <sup>4)</sup>통합 정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

○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MaaS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스, 지하철, 공영 PM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,

○ '24년부터는 철도 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, 여행·숙박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예약·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.

\* (1단계<sup>23</sup>) 철도예매 앱에서 관련 정보 제공 → (2단계<sup>24~</sup>) 통합 예약·발권 서비스 추진

□ 개인형 이동수단(PM)법 제정, 관련 인프라 확충,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, 공유차량(카셰어링)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퍼스트·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강화한다.



- 특히, 철도역사 등 교통 거점 주차장, 공영 주차장 등에 공유차량(카셰어링)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,
- 공유차량 편도 이용자가 차량 반납 시, 사업자가 차량을 대여 장소로 다시 이동시킨 후 영업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이동 수요에 따라 편도 반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.
- 내년부터는 UAM, 전기·수소차,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·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(MaaS Station) 사업도 신규로 추진(계획 수립비 국비 지원)한다.

## (2)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

-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-지하철 통합 정기권,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\* 등 다양한 요금체계의 도입방안을 마련한다.

\* 버스·지하철 및 공영 자전거 등 공공형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월 정액 이용

- 또한, 우선 신호 처리를 통해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Super-BRT와 수요에 따라 분리·결합이 가능한 모듈형 버스 등 최첨단 대중교통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.

## (3) 민간의 혁신 서비스 발굴·확산 지원

- 관계 법령에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·확산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

\* 현재 산업융합, ICT융합, 지역 산업, 금융, 스마트도시, 특구 산업 등 6개 특례 운영 중

- 아울러,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.
-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연계·분석과 민간 제공을 위한 모빌리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. 플랫폼 구축 전에는 기 구축한 자동차, 물류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수요 맞춤형 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.

## ⑤ 과제5 :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

□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,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,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한다.

### (1) 미래 모빌리티 확산 거점 조성

□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, 관련 수단·인프라를 전면 적용하여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‘모빌리티 특화도시’를 만든다.

○ 이를 위해 정부-지자체(또는 공공기관)-민간 협업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 모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실시한다.(신규 도시 1개소, 기존 도시 2개소 내외 선정 예정)

○ 3기 신도시\* 등 신규 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구도심\*\*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,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서는 본사업화를 지원한다.

\* (1단계<sup>23</sup>) 계획 수립 및 설계(1개소) → (2단계<sup>24~</sup>) 본격 조성(1개소) 및 후속사업 선정

\*\* (1단계<sup>23</sup>) 계획 수립 및 실증(2개소 내외) → (2단계<sup>24~</sup>) 평가 후 우수 사업 추가 지원

□ 도로·철도 인프라의 복합 개발을 통한 수직 활용체계 구축, 주유소·주차장·정류장 등 도심 인프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존 교통 인프라를 모빌리티 혁신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.

### (2) 모빌리티 시대에 부합하는 공간구조 재설계

□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 구조 변화를 예측하고, 이를 고려하여 기존 공간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.

○ 이를 위해 민·관 합동 TF를 구성하고, 기존 공간 구조 관련 제도와 모빌리티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한다.

### 3. 향후 추진계획

-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·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,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.
  - 특히, 로드맵의 주요 과제를 1)내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단기 과제, 2)27년까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중기 과제, 3)이후 지속 검토·추진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구분하고, 과제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,
  -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·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로드맵의 이행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- 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”고 강조하면서,
  - “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,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,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  - 아울러, “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”면서, “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·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”고 밝혔다.

# 참고1

## 시기별 주요 과제



추진 과제	담당부서
<b>1. 운전자가 필요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</b>	
<b>① 대중교통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국민 일상 안착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Lv4 버스·셔틀 및 택시 상용화 지원</li> </ul>	교통정책총괄과 최민석 서기관(044-201-3792) 버스정책과 한수증 사무관(044-201-3826) 모빌리티정책과 장상준 사무관(044-201-4756) 첨단자동차과 신현성 사무관(044-201-3848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자율주행 신규 서비스 도입</li> <li>▪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</li> </ul>	첨단자동차과 신현성 사무관(044-201-3848)
<b>② 자율주행 본격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Lv4 안전기준, 보험·운행 제도 완비</li> </ul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자율차 시범운영지구 확대</li> </ul>	첨단자동차과 신현성 사무관(044-201-3848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임시운행허가 제도 개선</li> </ul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차종 분류 유연화</li> </ul>	자동차정책과 김혁 사무관(044-201-3850)
<b>③ 親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프라의 전국 구축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C-ITS 전국 구축</li> </ul>	첨단자동차과 홍예표 사무관(044-201-3934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정밀도로지도 전국 구축</li> </ul>	첨단자동차과 박미희 사무관(044-201-4081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 선정</li> </ul>	도로정책과 이종현 서기관(044-201-3876)
<b>④ 자율주행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K-City 혁신성장지원센터 입주 지원</li> </ul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역 기업 대학 테스트베드 구축</li> </ul>	첨단자동차과 이향 사무관(044-201-3852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</li> </ul>	
<b>2.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</b>	
<b>①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본격화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UAM 서비스 출시</li> </ul>	도심항공정책팀 곽상훈 사무관(044-201-4302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UAM 서비스 유형 다각화</li> </ul>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드론 서비스 확산 및 드론 공원 조성</li> </ul>	첨단항공과 박정권 사무관(044-201-4226)
<b>② 미래를 준비하는 선제적 규제 개혁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UAM 법·제도 기반 마련</li> </ul>	도심항공정책팀 곽상훈 사무관(044-201-4302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확대</li> </ul>	첨단항공과 박정권 사무관(044-201-4226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드론 비행·안전·보험 규제 완화</li> </ul>	첨단항공과 이석진 사무관(044-201-4315) 항공기술과 원정윤 사무관(044-201-4285)
<b>③ 서비스 확산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 투자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UAM 버티포트 및 통신 인프라 구축</li> </ul>	도심항공정책팀 곽상훈 사무관(044-201-4302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드론 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</li> </ul>	첨단항공과 박정권 사무관(044-201-4226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역 체계 구축</li> </ul>	도심항공정책팀 조재익 사무관(044-201-4199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항 비행관리 플랫폼</li> </ul>	항행시설과 양창생 사무관(044-201-4357)
<b>④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UAM 핵심 기술 연구·개발</li> </ul>	도심항공정책팀 조재익 사무관(044-201-4199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UAM 팀코리아 운영 확대</li> </ul>	도심항공정책팀 곽상훈 사무관(044-201-4302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드론 인력 양성</li> </ul>	첨단항공과 박정권 사무관(044-201-4226)
<b>3.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</b>	
<b>① 전국 어디서나 당일 운송 서비스 실현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무인 배송 제도화</li> </ul>	상황총괄대응과 이민규 사무관(044-201-4156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무인배송 실증·시범사업</li> </ul>	첨단물류과 최은영 사무관(044-201-4013) 상황총괄대응과 이민규 사무관(044-201-4156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 대응</li> </ul>	첨단물류과 최은영 사무관(044-201-4013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</li> </ul>	첨단물류과 최은영 사무관(044-201-4013) 철도투자개발과박선동 사무관(044-201-4133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하이퍼 튜브 기술 개발</li> </ul>	철도안전정책과 이인원 사무관(044-201-4603)
<b>② 기존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 대전환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</li> </ul>	첨단물류과 최은영 사무관(044-201-4013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확대</li> </ul>	첨단물류과 한다송 사무관(044-201-4009)

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인센티브 확대</li> </ul>	첨단물류과 최은영 사무관(044-201-4013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심 내 첨단 물류센터 확충</li> </ul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디지털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</li> </ul>	

### ③ 물류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물류 스타트업, 중소기업 지원</li> </ul>	물류정책과 백병성 사무관(044-201-3996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물류 인력 양성</li> </ul>	물류정책과 신동기 사무관(044-201-399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물류산업발전기본법 제정</li> </ul>	물류정책과 이경수 서기관(044-201-3994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래 물류기술 연구·개발</li> </ul>	첨단물류과 최은영 사무관(044-201-4013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디지털 물류실증 사업 확대</li> </ul>	물류정책과 백병성 사무관(044-201-3996)

## 4.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

### ① 이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한 서비스 다각화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요응답형 서비스 확대</li> </ul>	버스정책과 한수증 사무관(044-201-3826) 광역교통경제과 박태현 사무관(044-201-5082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 대중교통 서비스 탄력 운영</li> </ul>	버스정책과 한수증 사무관(044-201-3826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간 주도 MaaS 활성화</li> </ul>	모빌리티정책과 문채빈 사무관(044-201-3820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 MaaS 선도 사업</li> </ul>	광역교통경제과 박태현 사무관(044-201-5082) 철도운영과 이기찬 사무관(044-201-4632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</li> </ul>	모빌리티정책과 문채빈 사무관(044-201-3820) 광역교통경제과 주현오 사무관(044-201-508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카셰어링 규제 완화(주차구획, 프리플로팅)</li> </ul>	모빌리티정책과 문채빈 사무관(044-201-3820) 생활교통복지과 조광영 사무관(044-201-3814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환승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</li> </ul>	광역환승과 곽병철 사무관(044-201-3998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MaaS Station 추진</li> </ul>	

### ②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버스-지하철 통합 정기권 도입</li> </ul>	광역교통경제과 박태현 사무관(044-201-5082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빌리티 구독제 도입</li> </ul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S-BRT 도입</li> </ul>	광역교통도로과 신동민 사무관(044-201-5120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듈형 버스 도입</li> </ul>	광역버스과 서지훈 사무관(044-201-506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율주행 BRT 상용화</li> </ul>	광역교통도로과 신동민 사무관(044-201-5120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친환경 트램 상용화</li> </ul>	광역시설정책과 정재원사무관(044-201-5102)

### ③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 발굴·확산 지원

■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	교통정책총괄과 최민석 서기관(044-201-3792)
■ 모빌리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	생활교통복지과 박영주 사무관(044-201-3812)

## 5.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

### ① 미래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 조성

■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	교통정책총괄과 최민석 서기관(044-201-3792)
■ 기존 인프라 복합 개발	도로정책과 강지연 사무관(044-201-3877)
■ 스마트 주차장	생활교통복지과 조광영 사무관(044-201-3814)
■ 사업용 차량 충전 시설 조성	교통정책총괄과 심동휘 사무관(044-201-3788)

### ②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공간구조 재설계

■ 모빌리티 현황 조사	교통정책총괄과 최민석 서기관(044-201-3792)
■ 공간 구조 정합성 검토	

